

01

chapter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 30년의 변화¹⁾



정충식 || 경성대학교 교수

I. 정보화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디지털정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화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화를 본격 추진하였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정부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과거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거쳐서 2020년 12월말부터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하였으며, 정보화촉진기금 마련 등 국가정보화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정보화 도입·발전·성숙기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여 오고 있다.

1) 이 글은 필자가 2021년 3월에 출간한 책 (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의 내용을 발췌하여 보완한 것입니다(정충식, 2021).

1996년에는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촉진 10대 중점과제, 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 정보화 추진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정·보완이 요구되어, 1999년 3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Cyber KOREA21’을 수립하였다.

그 후 2002년 4월에는 글로벌화와 전 국민의 정보화 능력함양 요구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보화 비전을 반영하여 제3차 계획의 수정버전으로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을 수립하였다. 한편 2006년에는 기술의 빠른 발달 속도에 맞춰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2001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통령직속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정부가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로 격상되어 추진되었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는 집권 초반부터 대통령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0년, 2012년 및 2014년 등 연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되고 정보화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촉진과 확산 중심의 기존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IT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 되면서 정보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촉진에서 활용으로의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명박정부는 2008년 12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저성장의 장기화, 불확실성의 증대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설정 및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CT가 사회 전반에 내재화 되면서 그간 추진해온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ICT와 결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서 정보화의 역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2013

년 12월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와함께 박근혜정부는 정부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어서 문재인정부는 2018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2년까지 35%로 확대(’18년, 21%)할 방침이고,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 20%(’18년 9.5%)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의 다양한 변천 과정을 통하여 정보화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김영삼정부(1993-1997년)의 정보화

김영삼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94년 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 1995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기반 조성
- 1995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6년 1월 1일 시행)
-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
-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1) 정보통신부 신설 (1994년 12월)

1994년 12월에 김영삼정부는 기존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는 등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개각을 추진하였다. 개각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새로이 지명하고 18부 장관을 교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로 확대개편하고, 상공부와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다. 기존의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하여 개편됨에 따라서 정보화 선도 부처로 변신하면서, 정보통신 정책과 우편사업, 전파방송 관리, 체신금융, 정보통신지원과 협력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발족을 계기로 정보통신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정보통신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시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은 1994년부터 수립되어 1995년 3월에 확정된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 정책계획이다. 문민정부는 1995년 3월 14일에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수립 당시 책정된 소요예산은 2015년까지 총 45조원으로 단일사업으로는 당시에 국내 최대 규모였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 선도시험망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전략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목표시점이 2015년, 2010년, 2005년 등으로 단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추진목표와 전략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를 3단계로 구분하여 총 45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여 1995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 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로 완료될 예정이었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5년 앞당기고, 예산도 45조원에서 31조 9천억원으로 축소시켰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년 8월)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사업으로 체신부의 정보통신부로의 개편과 정보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1993년 6월 체신부에서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발전특별법안을 작성하여 입법추진 한 이후에, 몇 차례에 걸친 입법추진활동이 계속되었지만 법령으로 성립되지 못하다가,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된 후 적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1995년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고 동년 8월에 공포되었고, 그 후속작업으로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1995년 말에 공포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에 이 법은 2009년 5월 22일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6월 9일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4)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금은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1995년 8월 4일에 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개정·확대된 것으로, 국가차원의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3의 2제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 인력의 양성사업, 위에서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기타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되었다.

5)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1996년 6월)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6월 11일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제1단계 기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부, 교육, 학술연구, 산업, 교통물류, 지역정보화, 의료, 환경, 안전관리 및 국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전자정부가 나타나고 있다.

Ⅲ. 김대중정부(1998-2002년)

김대중정부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정보화의 분야에서는 한 단계 진보하여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1월 새천년 신년사에서 지식정보강국 강조
- 2001년 3월 전자정부법 제정 (2001년 7월 1일 시행)
- 2002년 10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 2002년 11월 전자정부 11대 과제 완성

1)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2000년 1월)

2000년 1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 새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 신년사는 지식정보시대에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및 전국민 정보생활화 운동을 제시하였다.

2000년 1월 3일 김대중대통령의 새천년 신년사 발표 이후에 모든 정부 부처들은 후속 대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전자정부법 제정 (2001년 3월) (2001년 7월 1일 시행)

2000년 3월 대통령에 대한 새천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의 제정 권한을 획득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업무보고에서 10대 역점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③ 21C型 電子政府를 早期에 構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전자정부법의 제정 이유를 행정자치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기술(IT)과 정부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의 결합을 통한 정부경쟁력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전자정부의 비전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01년 3월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을 법률 제6439호로 공포하였고 2001년 7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정부법은 그 동안 전부개정 네 번을 포함한 일곱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보완되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서 전자정부의 날을 제정하였다. 2021년 현재의 전자정부법(법률 제17370호)은 본문 7장 78조로 구성되어 있다.

3)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2002년 10월)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 만인, 2002년 10월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캐나다의 2배,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에 이르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전국 1,450만 가구 기준으로는 69%, 4,700만 인구 기준으로는 21%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유선전화가 1,000만 회선을 돌파하는데 100여년, 이동전화기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데 18년 걸린 점에 비춰 이 같은 성장 속도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2년 11월 6일에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축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포된 그 동안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98년>

o 1998. 2월 : 김대중 대통령 취임 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닦아나가겠다” 는 의지 표명

- 1998. 5월 :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방안 수립(제1차 정보화전략 회의)
- 1998. 6월 : 두루넷 국내 최초로 케이블모뎀 서비스 개시
- 1998. 10월 : 하나로통신 케이블모뎀 서비스 개시
- 1998. 12월 : 가입자 13,801명

<1999년>

- 1999. 3월 : Cyber Korea 21 수립(제2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 1999. 4월 : 하나로통신 세계 최초로 ADSL 서비스 개시
- 1999. 4월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
- 1999. 6월 : 한국통신 ADSL 서비스 개시
- 1999. 12월 : 가입자 373,571명

<2000년>

- 2000. 6월 : 1,000만명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 2000. 12월 :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무료인터넷 보급 완료
- 2000. 12월 :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사업 완료(전국 144개 지역에 광전송 및 ATM 기반의 초고속 국가망 구축 완성)
- 2000. 12월 : 가입자 402만명 돌파

<2001년>

- 2001. 6월 : 초고속정보통신망 3단계 고도화계획 수립
- 2001. 10월 : OECD,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공인
- 2001. 12월 : 가입자 781만명 돌파

<2002년>

- 2002. 4월 : e-Korea Vision 2006 수립(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 2002. 10월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000만 돌파

4) 전자정부 기반 완성: 11대 과제 종료 (2002년 11월)

2001년 5월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2002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중점과제를 담은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을 수립하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정부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사용자의 관점에서 2002년 10월말 구현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으로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사업, 행정의 생산성 제고 사업, 전자정부 기반 구축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11대 과제의 중요성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어 그 추진이 결정되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이른바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김대중정부는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하였다. 2002년 9월 3일 전자조달시스템이 개통됐고, 2002년 11월 1일에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이 개통되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1월 13일 청와대에서 전자정부 기반완성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전자정부의 본격 출범을 선언하였다.

IV. 노무현정부(2003-2007년)

노무현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즉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3년 4월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
- 2003 - 2007년 전자정부 31대 과제 추진
- 2007년 9월 전자정부 완성 보고대회 개최

1)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2003년 4월)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상설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과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회는 그 구성으로 보면 본 위원회 외에 7개 분야의 전문위원회(행정개혁전문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재정세계전문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혁신분권평가전문위원회)가 활동을 하였다.

2)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 (2003년 8월)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과 연계된 범정부적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03년 8월에 전자정부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은 4대 분야, 10대 어젠다, 31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 전자정부 31대 과제 추진 (2003년 - 2007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2003년 5월 ‘전자정부의 비전과 추진원칙’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후 전자정부의 비전과 추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선정에 착수하였다. 과제 발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취합된 과제들은 13차례에 걸친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2003년 8월 14일에 노무현대통령이 주관한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확정·발표되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혁신 등의 4개 분야에 걸쳐 총 31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전자정부 31대 과제들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준비/기반조성의 단계이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기반을 조성하였다. 2004년에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BPR/ISP를 실시하고, 공통기반을 구축하였다. 2005년에는 통합/혁신의 단계이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하여 시스템을 통합시켰다. 2007년에는 혁신/평가의 단계이며, 통합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정부혁신을 구현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였다.

4) 전자정부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2007년 9월)

참여정부는 2007년 9월 19일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및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전자정부 추진성과 보고회는 전자정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박람회(19일-21일)’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이 보고회는 지난 5년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하는 자리로서, 정부혁신의 전략적 수단이자 구체적인 성과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한 전자정부 사업의 그간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요자인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분야의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고,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들이 세계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V. 이명박정부(2008-2012년)

이명박정부는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8년 2월 정보통신부 폐지
- 2008년 12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 2009년 11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 2010년 1월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1위 달성
- 2010년 7월 스마트워크 추진정책 대통령 업무보고
- 2011년 3월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발표

이명박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구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추진 정책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부 폐지 (2008년 2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5년 이후 ICT정책의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부가 2008년 2월 28일에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IT산업정책),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정보보호, 정보화정책), 방송통신위원회(전파 및 통신, 방송통신융합, 이용자 및 네트워크 보호 등) 및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등) 등으로 각각 이관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인하여 이명박정부는 집권 내내 ICT기업과 산업을 홀대하고, 국가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2)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2008년 12월 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며, 정보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선진일류국가의 국정비전에 따라서 정보화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2009년 11월)

이명박정부는 2008년 2월에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국가정보화의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의 기능을 통합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해체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화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제정하는 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008년 7월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개편하여 활용하였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1월 23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

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2009년 8월 23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2009년 11월 10일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국가정보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기존 총리실 산하였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개편한 것이었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정부위원 16명, 위촉직 민간위원 1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정책에 관한 최고심의·조정기구로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정보화 정책의 조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명박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이 강화되고, 정보화 분야의 국정과제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에 대하여 부처들에게 실질적인 조정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23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여 폐지되었다. 이처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를 두었던 대통령직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구성된 지 3년 5개월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4)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1위 달성 (2010년 1월)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출범은 우리나라에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권의 교체는 전자정부의 추진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기존에 노무현정부가 추진해 오던 전자정부 정책들은 최소한의 사업만을 남기고 폐기되었다. 2010년 1월초에 UN 전자정부 평가가 발표되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에, 최근 발표된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2010년에 UN 전자정부 세계1위를 달성한 것은 참여정부 31대 과제의 성공적인 집행

의 결과인 것이다. 정책과 제도의 시차적 접근방법(Time Lag Approach)에 의하면, 제도나 조직은 생명체와 비슷한 생명주기(Life Cycle)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에서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0년 UN 전자정부의 평가는 2008년 후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평가 대상들은 모두 2003-2008년까지 참여정부에서 구축된 31대 전자정부 시스템들의 성공적인 집행의 결과물들이다. 그러므로 2010년 UN 전자정부의 평가는 정책의 시차적 효과 측면에서 그 성과를 접근하여야 한다.

5) 스마트워크 추진정책 대통령 업무 보고 (2010년 7월)

이명박정부에서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스마트워크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2010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준비하였다. 2010년 7월 20일 당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에게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보고하였다.

6)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 발표 (2011년 3월)

2008년 집권한 이명박정부는 2009년까지 전자정부 용어의 사용을 금기시하다가,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1위를 달성함에 따라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에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전자정부란 “진화된 IT기술과 정부 서비스 간에 융·복합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진화(進化)하는 선진화된 정부”를 의미한다.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은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어서 스마트 전자정부의 전략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 ① (공개 : Open) - 공공 정보·서비스 공개 및 개방
- ② (통합 : Integration) - 수요자중심 서비스 통합 및 다채널 통합

- ③ (협업 : Collaboration) - 조직, 부서간 협업 및 정보 공유
- ④ (녹색정보화 : Green) - 친환경적 및 저비용 시스템 구축

VI. 박근혜정부(2013-2017년)

박근혜정부는 정보화 및 정부3.0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o 2013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o 2013년 6월 정부3.0 비전 선포식 개최
- o 2014년 6월 UN 전자정부 평가 연속 3번 세계 1위
- o 2014년 7월 정부3.0추진위원회 구성
- o 2016년 4월 전자정부2020 종합계획 발표
- o 2017년 3월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발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해체한 것이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체하고자, 어렵게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출범시켰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였다. 폐지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위원회 조직들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국가정보화의 기능을 새로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및 정부3.0 정책 등은 분산된 추진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국가정보화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리고 전자정부와 정부3.0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이 바뀐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셋째는 정부3.0의 등장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5대 분야에서 국정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또한 5대 국정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운영시스템의 혁신방안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일방향(1.0)을 넘어 쌍방향 정부(2.0)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시대’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정부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하는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3년 4월)

박근혜정부는 출범 26일 만인 2013년 3월 22일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 ICT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들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면서 발족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작업 초기에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과 함께 콘텐츠(Content: C)-플랫폼(Platform: P)-네트워크(Network: N)-디바이스(Device: D)의 ICT 생태계 육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로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대 부처 신설에 대한 야당의 견제와 그 밖의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ICT 정책 기능은 일부만을 이관 받게 되었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전 과학기술부 업무뿐만 아니라, 예전 정보통신부 관할이던 통신기술(ICT)과 우정사업본부의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에 논란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려하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소관업무에 관련한 법령 제·개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지만,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남게 되었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SW산업과, SW융합과, SW융합팀 등 SW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도 임베디드SW는 계속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방통융합서비스인 스마트TV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IPTV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산되었다. 기존 행정안전부 업무 중에서 정보보호정책, 정보문화의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는 안전행정부에 남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업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 거래인증,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사업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

였지만, 게임을 비롯한 문화기술(CT) R&D, 인력양성, 컴퓨터그래픽, 3D콘텐츠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과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결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서열이 배정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ICT를 총괄할 핵심부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부처의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부처의 이름에 창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영문으로 직역하면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 정도로 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창조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계와 불교계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영문 이름은 Creation이 빠진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였다.

2) 정부3.0 비전 선포식 개최 (2013년 6월)

박근혜정부는 2013년 6월 19일에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안진행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정부3.0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관계부처 합동, 2013).

3) UN 전자정부 평가 연속 3번 세계1위 (2014년 6월)

박근혜정부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정보공개, 그리고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홍보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에 정부3.0을 과거 정부의 낡고 오래된 전자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3.0과 전자정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3.0을 박근혜정부만의 독창적인 정책으로 홍보하였다.

2014년 6월말에 UN 전자정부 평가가 발표되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6월 24일에, 최근 발표된 2014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부3.0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와 정부3.0 사이에 개념 및 서비스 영역 등에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3.0이 전자정부와 무관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던 박근혜정부는 2014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1위를 하자, 정부3.0의 덕택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4) 정부3.0추진위원회 구성 (2014년 7월)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014년 중반에 추진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2013년에 추진된 정부3.0은 추진 체계의 혼선과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6월 30일에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두고 2014년 7월 25일에 정부3.0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본 위원회 및 8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기획총괄, 맞춤형서비스, 클라우드, 정보공유·협업, 빅데이터, 개방, 변화관리, 지방·공공기관 분과이다.

그 외에도 ‘정부3.0추진위원회’는 전문기술 분석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연구단’ 및 사무국으로서 ‘정부3.0지원단’을 설치하였다. 특히, 다른 ICT관련 정부위원회와는 달리 사무국의 기능을 전담하는 지원단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5) 전자정부2020 기본계획 발표 (2016년 4월)

박근혜정부는 2016년 4월에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개년 전자정부 계획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ent)’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 2020의 비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ent)” 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감성 서비스(Citizen Experience)”, “지능정보 기반 첨단행정(Intelligent Gov.)”, “지속가능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6)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발표 (2017년 3월)

2016년 3월에 개최된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 간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에 전자정부의 추진 환경도 급속하게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많은 중앙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지능형정부 사업으로 재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2017년 3월에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현명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다. “지능형 정부” 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新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개의 핵심가치(공정, 투명, 유연, 신뢰, 창의, 포용)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 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VII. 문재인정부(2017년-현재)

문재인정부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
- 2017년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 2017년 11월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개최
- 2018년 3월 정부혁신 전략 회의 개최

-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 2020년 6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족 (2017년 7월)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이 시대적 정신, 정의실현과 함께,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국민안전’을 조직개편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단기성과 중심의 R&D 투자, R&D 투자전략 및 역할분담 불명확, 과학기술분야 간 융·복합 미흡 등으로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퇴보하거나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반에 대한 국가혁신체계를 재건하고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차관급 기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조정된 부처의 기능에 맞게 부처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을 전담하는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부처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정부조직법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 등을 부각하기 위하여 부처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다.

2)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2017년 9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영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간위원들은 각각 산업(9명), 학계(9명), 연구(2명) 분야에서 위촉하였다.

3)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개최 (2017년 11월)

2017년 11월 1일, 문재인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전자정부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해,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나온 50년, 앞으로 100년’이라는 주제로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역사에 대한 영상 상영과 전자정부 미래 비전 선포 및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대한 선정과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진행되었다.

이 당시에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전자정부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2017년 10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6월 24일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8년 6월 20일에 제1회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23일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거행해 오고 있다.

4) 제1차 정부혁신 전략 회의 개최 (2018년 3월)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19일에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다. 정부혁신의 목표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진입’,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및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 인식지수

정부혁신의 비전 및 3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다.

5)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2019년 10월)

문재인정부는 2019년 10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4대 추진 원칙과 6대 우선추진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6)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 12월)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국가의 비전과 범정부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첨단의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문재인정부는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인공지능 중심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하여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7)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2020년 6월)

문재인정부는 2019년 10월에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전자증명서 활용, 마이데이터 확대 등 우선 추진과제를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월에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5월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디지털 정부혁신의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전자정부 기반 덕분에 마스크 구매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국관리시스템, 검역관리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문자, 자가진단 앱, 그리고 데이터개방으로 공적마스크 앱 개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카드사와 협업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모바일 신분증(공적마스크 구매 시 본인확인), 마이데이터(소상공인 대출신청 구비서류 감축), 맞춤형 수혜서비스(각종 지원금 확인·신청)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진전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하여 2020년 6월에 발표하였다.

8)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7월)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에 개최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고, 5월 10일의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가운데서 디지털 뉴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한국형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다. 이것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을 의미한다.

한국형 뉴딜의 추진전략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맵”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90.3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국비 31.9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1조원), SOC 디지털화(국비 10조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VIII.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에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진행된 정보화 및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들 가운데는 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큰 효과를 거둔 것들도 있지만, 계획만 수립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정책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디지털 정부의 선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6년 6월 11일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1996년 김영삼정부에서 전자정부의 용어가 등장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정책이 추진된 것은 김대중정부의 후반기부터이다. 김대중정부는 집권 초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4대 부문 개혁에 초점을 두었고, 2000년 이후에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의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2003년에 집권한 노무현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전자정부를 대통령 의제로 선정하고 임기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Chung, 2020).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이며 정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한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정책의 연속성을 얻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지난 정부에서의 지속적인 예산 삭감을 통하여,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노후화되었고, 정부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정충식, 2018).

그동안 이명박정부는 전자정부 대신에 국가정보화를,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ICT 정부경쟁력을 퇴보시켰다. 이명박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의 전자정부를 단순히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격하시켰다. 박근혜정부는 초기에는 전자정부가 정부 3.0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전자정부를 정부 3.0의 업적 포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2010년, 2012년 및 2014년의 UN전자정부 세계1위의 평가 결과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미화하였다. 이러한 UN전자정부 세계1위의 업적은 지난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전자정부 사업들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정책의 시차적 효과에 의한 산물일 뿐이다.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구축해 놓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자정부의 이념 구현은 고사하고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난 10여년 동안에 제대로 된 사업이 수행된 적이 없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비정상적인 ICT정책들로 인하여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으며, 정부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의 ICT관련 조직은 거의 개편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구성된 정부 3.0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전부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전자정부는 대통령 의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업무의 하위 분야

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법제화되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구성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이전 박근혜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는 과거 박근혜정부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에 초점을 두었고, 정부혁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8년부터 추진된 정부혁신 더 나아가 디지털 정부혁신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비대면 본인확인 지원서비스 개선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범정부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넓은 관행 혁신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2019년에 가서야 디지털 정부혁신이 등장하는데, 기존의 정부혁신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0월 29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맞춤형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기존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이 기술지향적으로 수립된 것이었다. 더 나아가 정부혁신이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에 초점을 둔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책이었다.

이어서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월 17일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2019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AI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

털 정부가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9대 전략 가운데 7번이 바로 디지털정부 대전환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20년 상반기에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2020년 하반기에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부3.0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면서, 더 나아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자정부의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자정부를 정보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한 좁은 관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다. 이것은 디지털 정부혁신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고도화일 뿐이었다.

이처럼 현재 문재인정부는 총체적인 정부혁신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대변혁에 대응하여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별도로 추진되고, 좁은 시각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모두 현재의 거버넌스 한계 때문이다. 즉 정부혁신과 디지털 정부혁신이 전혀 별개의 조직 구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했던 정부3.0의 추진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공직사회의 개혁 즉 정부혁신이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시스템을 통한 정부혁신을 의미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총체적인 행정혁신은 이제 디지털 정부혁신의 구현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내에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정책을 융합시키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전자정부를 넘어서 즉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총체적인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이 남아있는 한국의 행정환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 [1] 정충식. (2018). 「2018 전자정부론」. 전면개정판. 서울경제경영. 2018년 6월 8일.
- [2] 정충식. (2021). 「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 서울경제경영. 2021년 3월 29일.
- [3] Chung, Choong-Sik. (2020). Developing Digital Governance: South Korea as a Global Digital Government Leader. May 20, Routledge. London: United Kingdom.